

부담금법 도입 22년 만에 첫 부담금 전면 정비

(해당 실: 재정관리국, 과: 재정성과평가과, 담당자: 이상협 사무관, 전화번호 044-215-5373)

I. 추진 배경

- 그간 지속적 정비 노력에 불구하고, 국민·기업에 부담이 되거나, 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이 여전히 존속 중*

* (언론·경제단체 지적) 국민들이 부담금 부과 사실을 모르거나,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

⇒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추진

II. 정책 내용

- **(정비안)** 91개 부담금 전수조사·원점재검토 거쳐 정비안 발표(3.27일)

- 국민건강·환경보전, 원인자·수익자 부담 원칙 등 “꼭 필요한 부담금”을 제외한 **32개 전체 부담금 정비**(14개 감면 및 18개 폐지)

- **(후속조치)**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**법령 개정 즉시 착수**

- **(감면)**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전력부담금 등 **12개 즉시 감면 중**(7.1일~)

- **(폐지)** 학교용지부담금 등 **18개 폐지**를 위한 법률안 국회 제출(7월말)

- **(관리체계)** 전면 정비와 병행하여 상시·지속적 부담금 정비,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→ 부담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(10월말)

* ①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, ②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, ③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**연간 2.0조원 국민 부담 경감** + 부담금 수도 91→69개로 대폭 축소

- 특히 전기·항공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거나,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중심 정비

